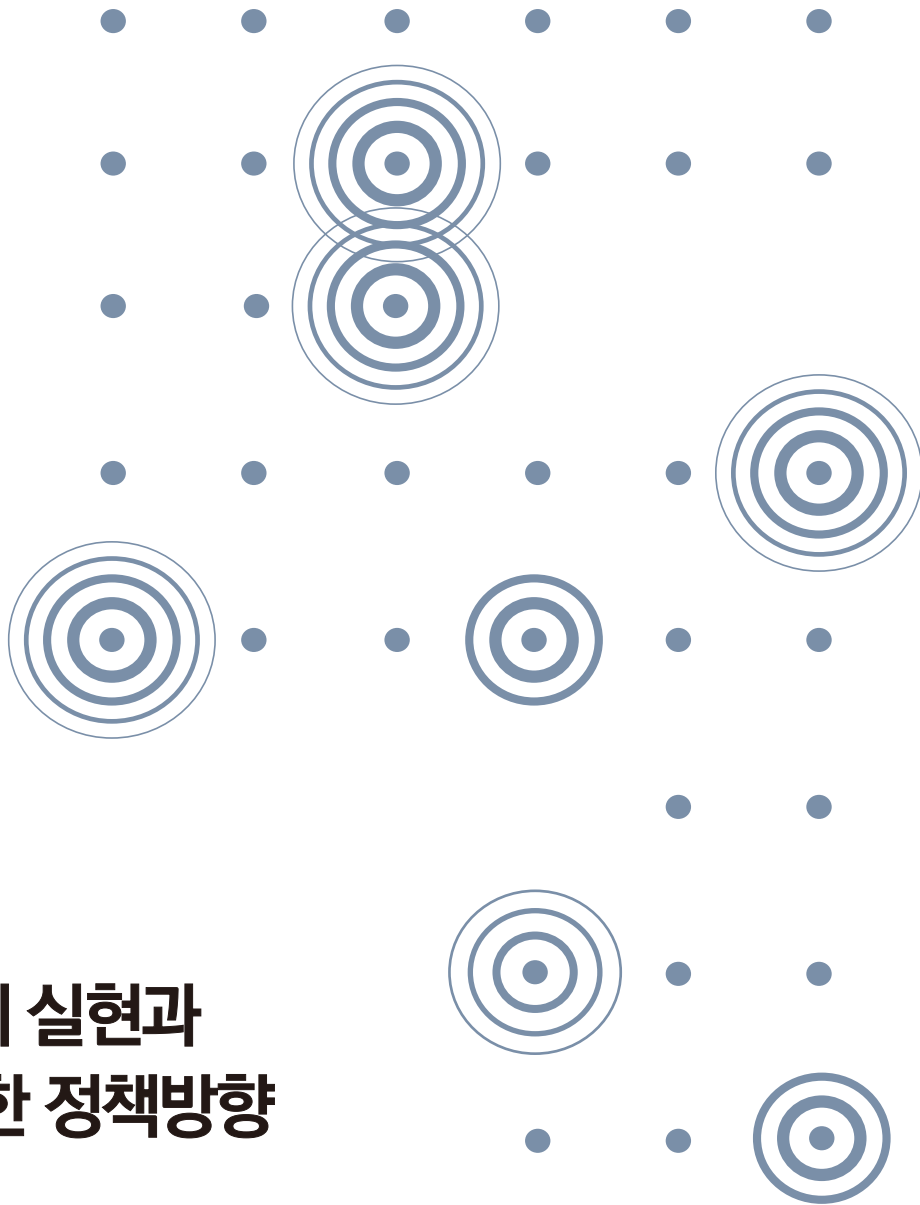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69호 2023. 4. 24



—
**서울시 공정경제 실현과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우영진

부연구위원

황민영

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69호

서울시 공정경제 실현과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발행인 박형수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3년 4월 24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공정경제 실현과 여건조성 위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4. 24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69

서울시 공정경제 실현과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우영진 부연구위원
02-2149-1109
yj.woo@si.re.kr

황민영 연구원
02-2149-1279
hminyoung@si.re.kr

요약	3
I. 공정성과 공정경제에 관한 예비적 논의	4
II. 공정경제 정책현황과 해외사례	7
III. 서울시 공정경제에 대한 전문가 진단	10
IV. 정책 제언	14

요약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의 과도한 집중으로 경제양극화 문제가 이어졌다. 최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차원의 지원과 동시에 경제회복을 달성하여 시장균형을 새롭게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지속된 공정성에 관한 담론을 짚어보고 공정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공정경제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부분을 진단한다. 전문가 진단 결과와 주요 국가의 공정경제에 대한 담론, 정책사례 등을 검토하여 서울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공정성은 다원적·다층적 개념,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범주화해야 할 필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의 과도한 집중으로 발생한 경제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정성 담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성은 주관적·객관적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의를 설정하기 어렵다. 공정경제란 경제활동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과 시장경쟁을 보장하는 경쟁시스템 유지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정경제의 개념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의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영역을 포괄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2022년 ‘공정경제도시 서울’ 비전 수립, 주요국에서도 공정경제는 정책 수립의 중요 개념

최근 서울시는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공정경제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주요 선진국 또한 각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경제의 개념을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구현하고 있다. 프랑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민주 경제, 사회협력의 사회연대, 투명한 소비과정, 기후환경을 생각하는 공유와 순환의 개념을 포괄한다. 독일은 기업가, 직원, 시민 모두가 성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진보에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네덜란드는 정직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평등한 갑을관계 도모 등 실천 가능한 공정경제 정책방향 세워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과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하도급 업체·가맹대리점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인식개선으로 평등한 갑을관계를 도모한다. 셋째,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경제적인 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서울시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경이라는 공공재의 공유를 확대한다.

I. 공정성과 공정경제에 관한 예비적 논의

I 경제영역에서의 공정성 논의는 경제주체 간 조화와 협력을 위한 필수 요건

공정성 담론은 사회적 불평등이 점증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정책적 주 관심사의 대상

-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성이 사회현상에서 점차 중요한 원칙과 가치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사건을 계기로 공정성은 청년 세대에게 치열한 논쟁의 주제로 각인
 -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시기인 근현대사를 지나온 이후 경제적 여유가 뒤따라왔으나 우리나라 국민은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ED Diener et al.(2010)은 한국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물질주의를 지목
 - 경쟁이 일반적인 가치가 되고 경쟁환경이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면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무너지고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등장
- 저성장 시대에 청년세대가 당면한 자원배분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상황에서 경제영역에서의 공정성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서울시는 경제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모색할 목적으로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공정은 서울비전 2030의 최상위 비전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와 주거 안정 측면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내포
 - 경제영역 내 공정성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 정책의 확장성에 한계

공정성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 비전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가치

- 2010년 정책적 화두로 부상하여 현재는 청년, 일자리 부문으로 구체화
 - 2010년 중앙정부는 공정한 법, 제도 운용, 균등한 기회 보장 등 공정사회 목표를 제시
 - 2017년에는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를 국정 지향으로 제시하면서 공정성 이슈는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이슈로 각인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가 국정과제로 채택
 - 2019년에는 경제활력과 공정사회·공정을 위한 개혁에서 공정성이 강조
 - 2020년에는 혁신과 포용의 바탕이 되는 공정사회 구현이 공정성 이슈로 제시
 - 최근 5년간 공정성 이슈는 세대의 경험과 기대, 대학 입학에 따른 졸업장의 가치, 대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결과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함에 따라 청년들이 직면하는 대학입시, 청년취업 이슈로 지속

공정성, 합의 어렵고 다원적·다층적 개념 ... 시기별로 주요 공공가치 연계

- 공정성은 공공영역에서는 기회, 사전 조건, 과정,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성의 의미가 제기
 - 일상 영역에서는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도의 운용과 결과를 논하는 규범적 평가의 잣대로 사용
 -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범주적 개념으로 비판의 무기로 활용
 - 공정성은 문자적 의미로 ‘공공영역에서의 옳음’으로 정의
 - 하지만 ‘옳음’의 의미가 주관적·객관적 차원에서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의 설정에 어려움¹⁾
- 공정성은 주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과 불공정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범주화하여 공정경제의 방향을 종합해야 할 필요
 -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정의(Justice), 공평(Fairness), 형평(Equity)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²⁾, 기회·절차·결과 세 개의 차원으로 개념을 구조화할 수 있음³⁾ ([그림 1] 참조)
 - 공정성은 광의의 의미에서 기회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을 포괄
 - 협의의 의미로는 절차의 공정성만 포함

	기회의 공정성 (Equality)	절차의 공정성 (Fairness)	결과의 공정성 (Justice)
개념	재산축적기회 · 교육제도 · 과세와 납세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 취업시장(취업기회)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 소득(합당임금 기회)
주요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고등교육 이수율 - 교육단계별 성인 고용률 •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 성별·연령별 고용격차 - 비정규직근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주의지수 - 공공청렴지수 - 정부신뢰도 - 법집행의 공정성 인식 • 자유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율, 사회단체참여율, 정치적 연관감 - 정치와 사회참여 공정성 인식 - 언론자유지수, 언론보도 공정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임금격차율, <u>지니계수</u>, 소득만족도 - 소득공정성인식, 자가점유비율 -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 여성전문관리직 종사자비율 • 보건·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 건강·의료서비스 접근 공정성 인식 - 사회복지재정비중 복지해택 공정성 인식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 간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는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협의의 공정성 개념에 포함			

자료: 조권중·최지원(20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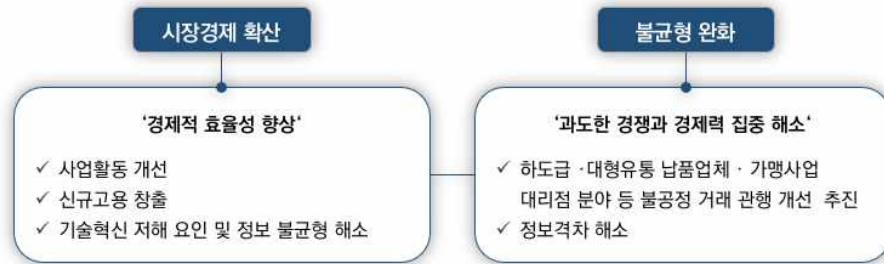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영역 공정성의 차원별 분류와 주요 측정지표

- 1) 조권중·최지원, 2020, 「공정성 담론과 서울 공정도시지표」, 서울연구원.
- 2)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 3) Jost, J. and Kay, A.C., 2010, “Social Justice: History, Theory, and Research”, In ST. Fiske, D. Gilbert and G. Lindzey(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5th ed., Vol. 2, pp.1122~1165). Hoboken, NJ: Wiley.; 김나연, 2020, “공정성 인식이 주관적 계층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51(1): 1~27.

I 공정경제,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하고 과도한 경쟁·경제력 집중 해결이 목적

공정경제의 개념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의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과 영역을 포괄해야 할 필요

- 공정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하여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그림 2] 참조)
 -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활동 개선, 신규고용 창출, 기술 혁신 저해 요인, 정보 불균형 해소 등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유경제를 실현
 - 과도한 경쟁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려고 하도급 분야, 대형 유통·납품업체, 가맹사업·대리점 분야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추진



[그림 2] 공정경제의 주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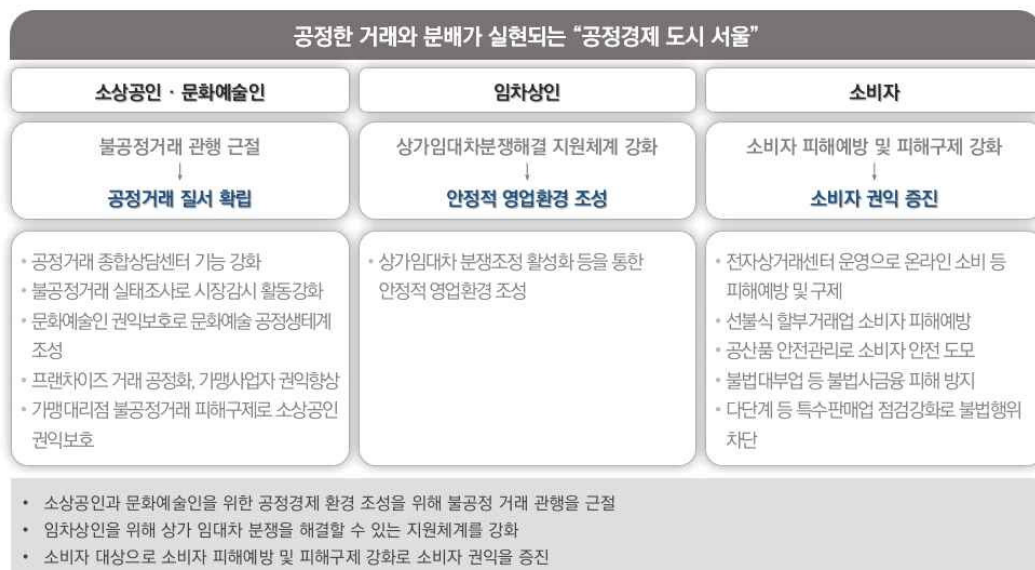
- 공정경제란 시장에서 경제활동의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과정을 보장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과 시장경쟁을 보장하는 경쟁 시스템 유지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
 - 시장실패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정부는 법적 틀을 만들어 경제·사회·경쟁정책 등의 조치로 시장에 개입
 - 공정경제의 적용 영역과 범위는 경제생태계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갱신을 필요

II. 공정경제 정책현황과 해외사례

I 서울시, 2022년 공정한 거래·분배가 실현되는 ‘공정경제도시 서울’ 비전 수립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임차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추진사업을 마련

-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 추진(그림 3) 참조
 -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기능 운영 및 강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로 시장 감시활동 강화,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로 문화예술 공정생태계 조성, 프랜차이즈 거래의 공정화를 통한 가맹사업자 권익 향상,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록·관리,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 제공과 교육 확대 등 사업을 추진
-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
 - 상가 임대차인 간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해 상담지원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분쟁 조정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분쟁해결 공적 역할 강화 등 사업을 추진
-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
 -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을 목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으로 온라인 소비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피해 예방, 불법대부업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교육,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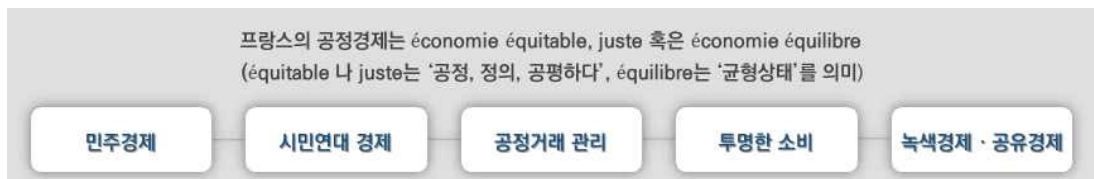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2022, 서울시 공정경제 기본계획('22~'26)

[그림 3] 서울시 공정거래 실현 비전과 추진 전략

I 독일·프랑스·네덜란드는 공정거래 외에도 공유와 순환으로 공정경제 개념 확장

각 국가의 특성과 철학을 반영한 공정경제 개념을 수립

- 프랑스의 공정경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민주 경제, 사회협력의 사회연대, 투명한 소비과정, 기후환경을 생각하는 공유와 순환의 개념을 포괄([그림 4] 참조)
 - 기업과 개인의 다양성, 공정, 포용(Diversité, Équité et Inclusion; DEI) 정책
 - 여성대표 할당제 등을 시행해 직업 평등을 구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장애인과 트랜스젠더 같은 사회 소수 계층의 사회진입 촉진을 목표
 -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둔 사회포용, 이익의 재분배, 사회공헌을 위한 사회연대에 집중한 공정경제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보다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권장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
 - 담당국을 설립하여 공정거래를 관리·감독
 - 개인의 수입과 가계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소비를 돕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투명한 소비 윤리를 도모
 - 공유경제보다는 순환과 녹색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공정성의 의미가 강조되어 공유경제의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에도 주목하여 관리



[그림 4] 프랑스의 공정경제 의미와 범위

- 독일의 공정경제는 기업가, 직원, 시민 모두가 성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와 진보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시장경제 체제 수립이 목적⁴⁾([그림 5] 참조)
 -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기후와 생물다양성 등 공공재의 환경보호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 거시경제적 표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경제성장 부문도 중요하게 관리
 - 디지털화되어가는 산업을 고려하여 디지털 규제 정책을 만들어 기업에 더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요구

4) 독일 연방 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이하 BPB)과 독일 연방 경제 및 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이하 BMWK)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정의 및 변화에 관한 글을 요약 정리. <https://www.bpb.de/kurz-knapp/lexika/lexikon-der-wirtschaft/20642/soziale-marktwirtschaft/>

- 중소기업 강화와 개인 창업 관련 구호 기회를 제공
-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고 숙련된 근로자 채용과 여성,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
-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고 구현하는 리빙랩을 활성화하여 예외적 허가 및 실험 조항을 근거로 신제품과 새로운 프로세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
- 입법자는 이러한 규제 관련 모든 사항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발전을 도모
 - 낙후된 지역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범 독일 모금 시스템도 운영 중



[그림 5] 독일의 공정경제 의미와 범위

- 네덜란드의 공정경제는 정직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에 초점⁵⁾([그림 6] 참조)
 - 2050년까지 산업구조를 순환경제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⁶⁾
 - 생산공정, 주요 동력, 순환 가능한 방식으로 디자인된 신제품 개발, 제품 폐기물 관리 책임제 등을 추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을 강조
 - 우수한 사회적 책임 정책과 활동을 보인 기업에는 투명성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크리스탈 프라이즈(Crystal Prize)를 수여
 - 정보공개 책임은 공공부문에도 적용되어 정부기관 사이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려고 노력
 -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공정거래 관리 감독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할당제 등 구직 시장 내 남녀평등에 집중



[그림 6] 네덜란드의 공정경제 의미와 범위

5)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Policy)와 산하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정경제 개념을 요약 정리

6)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https://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economic-affairs-and-climate-policy>)

Ⅲ. 서울시 공정경제에 대한 전문가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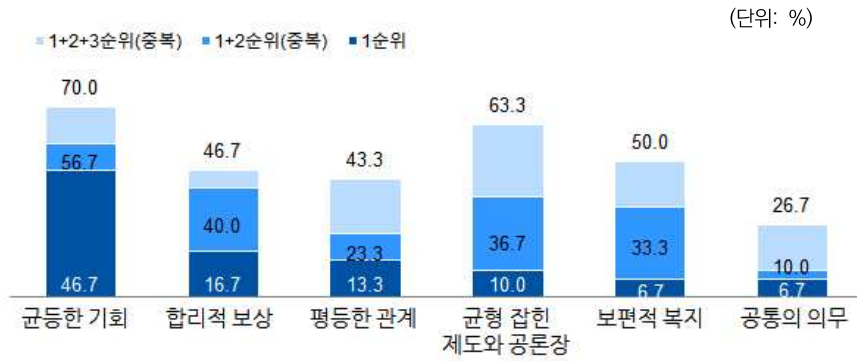
Ⅰ.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 조성, 하도급업체 권익 인식 등이 취약부문으로 선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업과 개인 측면에서 서울의 공정경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 서울시 공정경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
 - 공정성 관련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경제, 경영, 사회, 철학, 법학 부문 30인 전문가 대상 '22년 6월 23일~8월 2일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
 - 서울의 공정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 부문별 공정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서울의 경제 전반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57.8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 공정경제에 관한 부문별 인식은 기업과 개인 측면에서 각각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 ① 균등한 기회, ② 합리적 보상, ③ 보편적 복지, ④ 평등한 관계, ⑤ 균형 잡힌 제도와 공론의 장, ⑥ 공통의 의무([표 1] 참조)
 - 이 중 전문가의 46.7%가 균등한 기회를 서울시에서 가장 취약한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다음으로 합리적 보상(16.7%), 평등한 관계(13.3%)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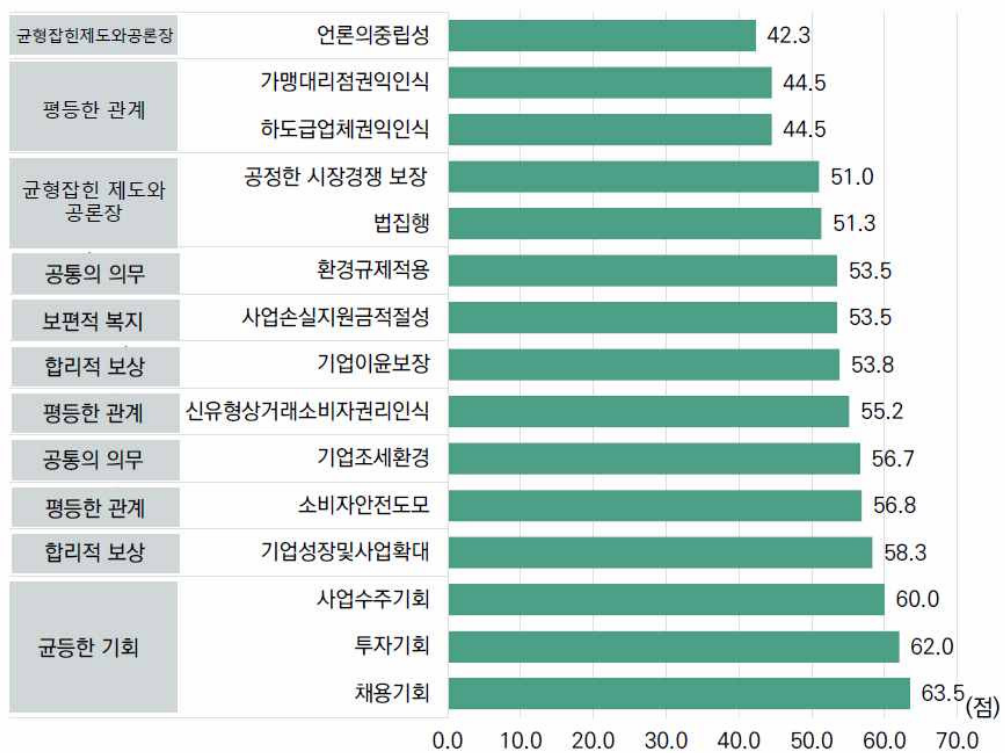
[표 1] 기업과 개인 측면으로 구분한 공정경제 부문 구성

분류	항목	기업 측면	개인 측면
분배의 공정성	① 균등한 기회	- 채용(구인) 기회	- 교육 기회
		- 투자 기회	- 취업 기회
		- 사업 수주 기회	- 주거 접근 기회
	② 합리적 보상	- 기업 이윤보장(중소기업)	- 소득(노동소득 측면 임금)
		- 기업성장 및 사업확대	- 자산형성(부동산, 주식) -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③ 보편적 복지	- 사업손실 지원금 적절성 (지급대상·지급규모·적시성)	- 건강·의료 접근성
- 문화·여가활동			
- 복지지원금 적절성(지급대상·지급규모 측면) - 복지시설 운영 및 혜택			
절차의 공정성	④ 평등한 관계	- 하도급업체 권익 인식	- 갑을관계(노사, 직장위계)
		- 가맹·대리점 권익 인식	- 성별 차이에 따른 인식
		- 소비자안전 도모	- 세대별 인식
		- 신유형 상거래 소비자 권리 인식	- 장애인 인식
	⑤ 균형 잡힌 제도와 공론장	- 법집행(대기업 특혜)	- 법집행(사회·경제적 지위)
		- 공정한 시장경쟁 보장	- 자유의견 개시
		- 언론의 중립성	- 정치참여
		- 기업 조세환경	- 병역의무 이행
⑥ 공통의 의무	- 환경규제 적용	- 조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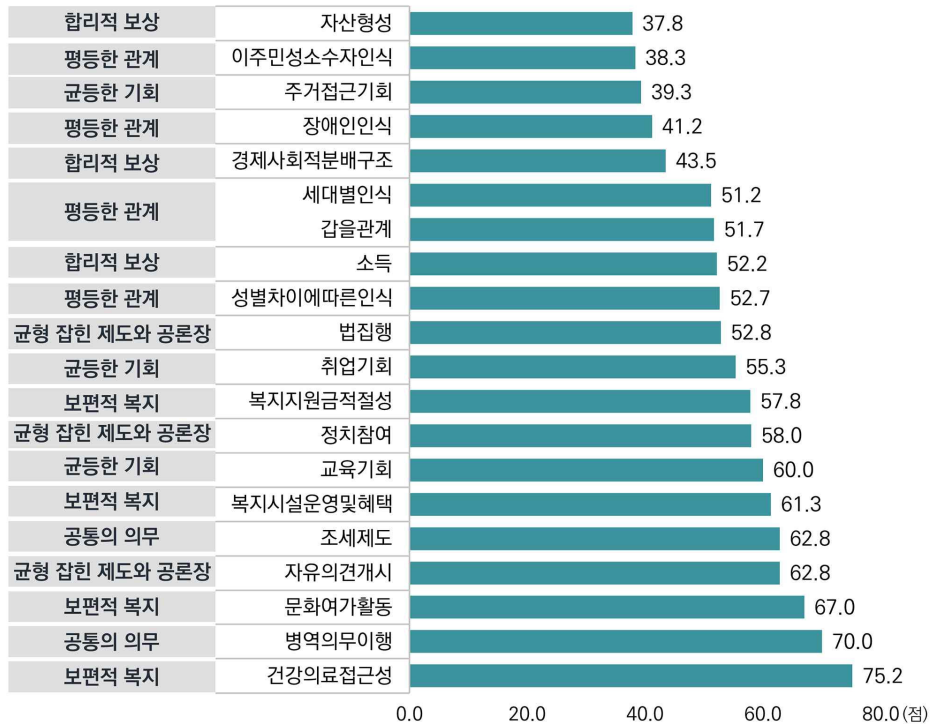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공정경제가 취약한 항목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

- 기업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언론의 중립성, 가맹대리점 권익 인식, 하도급업체 권익 인식, 공정한 시장경쟁 보장 등을 취약한 부문으로 인식(그림 8 참조)



[그림 8] 서울의 공정경제에 대한 기업 측면의 부문별 진단 결과

- 개인 측면에서는 자산형성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밝혀졌으며 다음으로는 이주민·성소수자 인식, 주거접근 기회, 장애인 인식 등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9] 참조)



[그림 9] 서울의 공정경제에 대한 개인 측면의 부문별 진단 결과

Ⅰ 서울시 공정경제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전문가들은 우선순위로 판단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 조성이 필요

- 전문가 진단 결과 가맹·대리점과 하도급업체의 권익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게 도출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자 간 정보 비대칭 및 협상력 차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서울시는 유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의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와 이들의 성장전략에 대한 고려가 시급
- 공정한 시장경쟁 보장, 법집행, 환경규제 적용, 기업이윤보장 관련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인식하는 의견도 다수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균형 잡힌 제도환경과 합리적인 보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

- 임금에 관한 분배의 공정성보다 합리적 보상을 통한 자산형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낮게 도출
 - 노동이나 자본소득으로 유·무형의 재산을 축적할 기회가 보장되기 어려운 여건을 의미
 - 경제·사회적 분배구조 부문에 대한 낮은 평가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
 - 자산형성이 개인 차원에서 공정성 수준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문인 만큼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공시를 확대하는 방안 도입 필요
 -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점유 형태가 다르며 계층 간 자산가치에 차이가 있어 자산형성에 대한 불공정성은 주거접근에 대한 기회 역시 취약한 구조를 형성

- 이주민과 성소수자 인식에 대한 낮은 공정성 평가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이 대체로 열악함을 의미
 - 과정의 공정성이 기회와 결과의 공정성 부문보다 높은 공정성을 보인다는 전문가 조사 결과와 달리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취약

IV. 정책 제언

I 협상력 격차 해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 가능한 공정경제 정책 필요

공정경제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둘 필요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합리적 이윤 배분과 임금 격차 해소
 - 다양한 신유형 유통채널이 경제생태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최소화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
- 하도급업체·가맹대리점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인식개선으로 평등한 갑을관계를 도모
 - 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정보공개 등으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협상력 격차를 해결하고 분쟁 발생 시 적시의 상담과 법률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경제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
 - 신유형 상품과 서비스에 의한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
-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경이라는 공공재의 공유를 확대
 - 순환 가능한 방식의 생산과 디자인을 공유하고 폐기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공정경제를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활성화 의미로 확장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기술혁신 촉진 기반 마련 - 신유형 유통채널의 성장을 위한 제도와 규제 정비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
하도급업체·가맹대리점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인식개선으로 평등한 갑을관계를 도모	- 거래 시 정보 비대칭 현상을 완화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경제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	- 신유형 상품·서비스 발달 등 시장변화에 맞춘 소비자 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구축
서울시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경이라는 공공재의 공유를 확대	- 장기적으로 공정경제를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활성화 의미로 확장

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기술혁신 촉진 기반 마련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활동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서울시 차원에서도 반영할 필요
 - 기존의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공정경제 관련 정책은 주로 거래관계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분쟁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법률지원에 중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20년 공정거래법을 일부 개정하여 기업집단의 혁신성장 촉진 측면에서 공정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반영

신유형 유통채널의 성장을 위한 제도와 규제 정비

- 다양한 신유형 유통채널이 경제생태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제를 최소화
 -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경제에서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시장영역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선행될 필요
 - 합리적인 시장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으로 합리적 이윤 배분과 임금 격차 해소를 실현
 - 대기업 경영 및 관리 경험이 많은 시니어 경영진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인적자본을 중소기업 경영에 활용 가능

Ⅰ 하도급업체·가맹대리점의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인식개선으로 평등한 갑을관계를 도모

거래 시 정보 비대칭 현상을 완화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강화

- 기업 간 거래 관계에서 정보공개 등을 통한 정보 비대칭 현상을 완화하여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분쟁발생 시 적시의 상담과 법률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지원 강화

- 그동안 서울시는 소상공인, 임차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분쟁 상담, 정보공개, 교육지원 등을 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여 경제생태계에 공정거래가 실현되도록 지원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불공정거래실태조사, 가맹사업 정보공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현장점검과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행정조치 등 시행
- 다양한 유통채널이 부상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시장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간 분쟁과 서울시 서비스업 종사 하도급업체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
 - 서울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고 이 중 유통업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유통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고충과 갑을관계로부터 발생한 피해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전문채널 구축 시급

Ⅰ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경제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

신유형 상품·서비스 발달 등 시장변화에 맞춘 소비자 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시스템 구축

-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유통시장 구조와 구독경제와 같은 신유형 상품·서비스 발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으로 구제 효율화
 - 라이브커머스, 클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중고물품 거래시장 플랫폼 등 소비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비자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확대 필요
 -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구제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을 확보
- 상조업,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학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운영을 강화
 - 서울공정거래협의회와 기존 서울시 공정경제위원회 등을 정기·상시로 개최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상생문화 확산을 유도

Ⅰ 서울시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환경이라는 공공재의 공유를 확대

장기적으로 공정경제를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활성화 의미로 확장

-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에서의 공정경제 확산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시장환경의 공유와 순환, 공정한 생산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활성화 의미로 확장할 필요
 -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경제환경의 표준화를 시도 중
 - 기업가, 직원, 시민 모두가 성공과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환경을 지속하기 위한 가치를 투영한 결과
- 순환가능한 방식의 생산 및 디자인을 공유하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 강화 및 홍보
 - 기업의 생산공정에서 원자재 사용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원에 대한 수요를 감소할 필요성을 시민사회와 공유
 -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과정 중 재화가 폐기되는 단계에서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을 홍보하여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에서 폐기물 중립경제를 실현
- 재활용센터, 유기농 카페, 환경교육시설 등의 운영을 확대하여 순환·녹색경제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
 - 사회적 환경기업이나 기업의 관련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생산자의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관련 시설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